

전북 임금총액, 전국평균보다 낮아

(상용근로자 1인당 월)

309만9000원으로 -31만7000원... 임금상승률 2.0%로 전국평균 -0.3%p... 근로시간 서울 +9시간

전라북도 근로자 임금총액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19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북 상용근로자 1인당 월 임금총액은 30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41만6,000원보다 31만7,000원 낮은 수치다.

전국적으로 보면 울산이 428만9,000원으로 가장 높고 서울(383만3,000원), 충남(352만3,000원), 전남(346만4,000원) 순이다.

이어 경기(332.8만원), 경북(332.6만원), 대전(332.0만원), 경남(325.7만원), 충북(318.4만원), 인천(314.9만원), 강원(302.4만원) 등이 300만원대를 형성했다.

반면 제주도는 256만4,000원으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낮았다.

대구(275만7,000원), 부산(296만4,000원), 광주(299만4,000원) 등도 월 임금총액이 300만원 미만인 지역에 포함됐다.

전북은 임금상승률도 낮았다. 전북의 임금상승률은 2.0%로 전국 평균 2.3%보다 0.3%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충북(5.4%)과 강원(4.8%), 충남, 대전(이상 4.7%), 제주(4.5%) 등이 가장 높은 임금상승률을 보였다.

전북의 근로자는 서울 근로자보다 월 평균 9시간 더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현실로 즐기는 놀이기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꾼다' 대토론회 식전 행사로 마련된 (주)라이크코퍼레이션 가상현실(VR) 체험장에서 참석자가 자이로드럼 VR 체험을 하고 있다.

전북지역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77.1시간으로 서울 168.0시간 보다 9.1시간 길었다.

전국으로 보면 충북이 185.6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경남(184.4시간), 충

남(184.3시간), 경북(183.4시간), 인천(183.1시간), 울산(180.1시간), 제주(179.9시간)·전남(179.9시간)의 순으로 길게 나타난 반면 서울시(168.0시간)가 가장 짧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충북이나 경남은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근로시간이 길고, 서울시는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비중이 높아 짧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민형 기자

지역특화산업 지원 참여기관·기업 모집

RITIS에 23일까지 온라인 접수 후, 26일까지 신청서류 제출

전북도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지원하는 '2016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3차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기술개발(R&D)과제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중 복합섬유소재산업 분야(탄소, 섬유)의 유망제품개발과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역주도형 R&D 과제는 전북 주력산업분야 유망품목 또는 KSIC(세계분류업종)에 해당한다.

또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내에서 자유공모 형태로 진행되며, 지역기업이 신청하면 과제관리전문기관인 전북지

역사업평가단을 통해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과제신청 및 접수의 경우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RITIS)에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 후, 26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지난해 복합섬유소재산업에 20억원을 투입하여 직접고용만 9명, 매출 148억원을 달성했으며, 특히 한국차체(주)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복합경량소재

이용한 고효율 병동차량 개발"은 우정국차 조달 수주(130대, 100여억원)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탄소산업 초기단계에 기술개발에 고심하는 탄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익산 미륵사지 제17차 발굴조사 22일 착수

익산시의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9월 22일부터 세계유산인 익산 미륵사지(사적 제150호) 제17차 발굴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전했다.

익산 미륵사지는 중서부고도문화권 정비계획에 따라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사역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가 진행되었다.

이번 발굴은 익산 미륵사지의 정비를 위한 학술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조사로 대상구역은 총 4,034㎡(강당지 남편 3,465㎡, 중원 남북중심축 312㎡, 동원 중문지 256㎡)이다.

정밀한 발굴을 위하여 사전 지하물리탐사(GPR)를 실시한 결과, 건물지 사이에 지하 석축배수로 등이 확인되

어 미륵사지 배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목탑과 금당지 사이에 축조된 토층을 조사하여 백제인의 뛰어난 토목건축 기술도 구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효율적 발굴 위해, 굴삭기와 소형트럭을 사용해 성토 지역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하부 2차에 발굴현장을 직접 설명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미륵사지 복원 고증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유적정비를 통해 세계유산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효자핸드레일' 금상... 도민 테마제안 공모

은상 2명 · 동상 3명 · 장려상 4명... 약자 배려 · 공동체 회복 · 공동체 활성화 내용

"골목길 한편에 핸드레일을 설치해 노인들의 통행을 돕자"

이처럼 생활 속에서 무심경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을 반복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어 공동체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도민 테마제안 등이 선정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안심하고 생활하는 행복전북 만들기'라는 주제로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7일까지 75일간 '2016년 도민테마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152건의 제안 중 10개

사업을 최종 채택했다.

도는 지난 13일 관련 실·국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상 1명과 은상 2명, 동상 3명, 장려상 4명을 선정했다.

도는 공정한 심사와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해 도민 제안이 정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현가능성 여부에 비중을 두고 2차례(실무심사 및 본심사)에 걸쳐 심사한 후 최종 제안을 선정, 발표했다.

심사결과 최우수 제안(금상)으로는

전북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마을마다 경사진 골목길을 다니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 골목길 한편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통행을 돕자는 내용의 '효자핸드레일'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아동, 임산부 등 약자 배려 문화 확산, 주민공동체 회복 및 도시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선정됐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전북도지사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은상 2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100만원, 동상 3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장려상 4

명에게는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이 있는 아이디어를 듣고 소통하기 위해 꾸준히 제안공모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제안제도를 통해 도민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도민 소통과 도정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매년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원확인이 용이한 공사현장 만들기(2015년)', '과속방지턱에 야광물질 도색(2014년)' 제안은 공모를 통해 선정 후 정책으로 도입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고민형 기자

5년간 전북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행위 45건 적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에서는 총 45건의 중고자동차 불법매매 행위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1건, 2012년 14건, 2013년 1건, 2014년 7건, 2015년 1건, 올 8월까지 1건 등이다.

유형별로는 매도신고기록 대장 미작성·등록번호관 미보관 등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성능점검 부적정, 매매업자 금지행위, 보증보험 미가입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 불법매매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매사업자와 종사원의 과도한 이윤추구, 자동차관리법 미숙지 등 기본적인 소양 부족, 인터넷을 통한 허위 매물, 미개 상품을 낮은 가격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뉴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